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제민주화 쟁점에 대한 실험설문: 프레이밍 효과를 중심으로*

박 원 호 | 서울대학교

안 도 경 | 서울대학교

한 규 섭 |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에서 논의되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쟁점들 중에서 복지에
산의 규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라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실험설문(survey experiment)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
다. 설문 응답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이슈에 대해 상이하게 표현된 문항들을 제
시하여 프레이밍(framing)에 의해서 정책 선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의 매개변수는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유권자들의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정책 선호는 정책 쟁점이 어떤 프레임 하에
서 제시되는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둘째, 프레이밍 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
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향, 즉 지지후보에 따른 선호의 차이에 비해 작다. 셋째, 정책
쟁점과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군가에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가 매우 다르게 차별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어: 프레이밍(framing), 제18대 대통령 선거, 정책선호, 경제민주화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2S1A5A2A03). 설문문항을 정리해 준 최재인, 신문기사와 후보자 공약을 정리해 준 서민
희와 귀중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신저자

I. 서론

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정책 쟁점이었다. 2011년 8월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 및 그 이후 10월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서 복지의 확대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요구라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새누리당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양대 정당 간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의 방향에 대한 상당한 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각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주요 정치세력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문재인 양대 후보들 간에 0~5세 무상 보육의 전면 시행과 같은 동일한 공약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통합민주당 측이 복지확대의 대상과 속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공약들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에 소요될 예산 규모에 대한 계산에 의하면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97조 원,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은 약 19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동아일보 12/12/10). 즉, 동일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와 폭에 대한 중요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향성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적인 개선을 내건 반면, 문재인 후보는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등 더 급속한 정규직화를 약속한 바 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박근혜 후보 후원회 2012; 민주통합당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과연 이러한 차이들은 유권자의 정책선호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혹은,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선호는 양 후보의 입장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경제민주화의 제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얼마나 안정적이며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가? 유권자들의 정책선호는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 쟁점들 중에서 1) 복지 예산의 규모,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3)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라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설문실험(survey experiment)을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문제의 프레임에 의해서 정책

선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의 매개변수는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쟁점들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책 설문으로는 불가능했던 풍부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권자들이 정책적 입장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대립·대조되는 판단근거들을 무작위로 할당된 두 집단의 설문참여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프레이밍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복지예산의 규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항은 사회 양극화 프레임과 세계경제 위기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공정성의 원칙을 공동으로 제시하고 한 그룹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반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제시하는 설문과 제시하지 않는 설문을 사용하였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들의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정책 선호는 정책 쟁점이 어떤 프레임 하에서 제시되는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둘째, 프레이밍 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향, 즉 지지후보에 따른 선호의 차이에 비해 작다. 셋째, 정책 쟁점과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군가에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가 매우 다르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유권자들의 선호가 프레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경제 민주화의 각 쟁점들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프레임의 효과가 지지후보에 따른 효과에 비해 적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호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이미 이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판단의 근거들을 고려해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최소한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유권자들의 선호는 컨버스(Converse 1964) 등이 보고한 미국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의 부재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약한 정치적 관심과 낮은 수준의 정치 지식으로 요약되는 유권자들이 정책적 내용에 대한 유의미한 이해와 평가, 나아가 선호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비판론은 1960년대의 미국 유권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지만(Zaller 1992 등), 적어도 201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한국 유권자들의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태도는 이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요하게는, 쟁점별, 집단별, 그리고 유권자의 속성(선호의 극단성, 지지후보 등)에 따라 프레임의 효과가 다를 것을 보이는 것은 프레이밍 효과의 매개변수(Chong and Druckman 2007)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1) 쟁점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프레임의 효과

가 작으며, 2) 진보적 유권자, 혹은 문제인 후보 지지자일수록 반대논거의 유무에 의한 차이가 적었고, 3) 후보자의 입장을 자신의 정책 입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후보자 효과¹⁾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는 프레이밍과 설문실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자원이 될 문헌의 내용을 검토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사용된 자료와 본 연구의 실험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제공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결과를 보고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공하면서 특히, 유권자들의 선호의 안정성 여부와 정책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II.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설문실험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책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판단하여 자신의 선호에 가까운 후보에게 투표한다. 한편 득표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유권자의 선호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Downs 1957; Dahl 1971; Schumpeter 1942 등). 이렇게 하여 민주주의 정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 정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능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을 필요로 한다. 달(Dahl 1971, 1)이 주장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은 정부가 유권자의 선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이나 유권자 선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선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권자의 선호를 묻는 가장 단순한 기제로 볼 수도 있지만 단일의 지배적인 쟁점으로 선거가 치러지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선거의 결과는 항상 수많은 정책적 이슈들의 조합과 정책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치학에서 단일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 선호를 파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설문을 통한 측정이며, 이것은 집합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제선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기관들이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샘플된 유권자 집

1) 정책에 대한 선호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결정 모형과 반대로, 지지하는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에 따라 유권자의 정책 선호가 변화하는 설득(persuasion) 효과가 있을 수 있다(Jackson 1976; Markus and Converse 1979).

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정책적 입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문조사, 특히 일반적인 횡단면(cross-sectional) 설문조사가 지나는 모집단 대표성의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기술적(技術的) 한계들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답자의 정책 선호가 얼마나 숙고된 것인지 또 충분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컨버스(Converse 1964)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념의 체계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문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은 마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즉흥적인 대답일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론을 반영한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이상(理想)의 근본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실험을 통해 이슈 프레임의 효과를 측정한다. 특정 시점에서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선호의 분포를 단층촬영하는 것과 같은 설문방식은 그것이 포착하고자 하는 대상의 안정성과 의미가 상당한 도전을 받는다. 반면 선호의 안정성, 정보화수준 등 다양한 측면을 더 풍부하게 탐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설문실험이다. 설문실험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대개 설문 순서 효과(question order effect)나 어구 효과(phrasing effect)를 실험으로 활용하여 관심 사안에 대한 여론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설문 연구에서 설문들 간의 순서나 특정 설문의 어구를 변화시키기에 따라 응답자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들의 영향을 연구한다. 즉, 과거에는 설문연구의 신뢰도(reliability)에 대한 문제점으로 치부되던 현상들을 오히려 실험 처치(treatment)로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어떤 주장이나 정책의 제시방식에 따른 효과차이를 연구하는 프레임 연구의 특성상, 설문실험이 관련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프레임(frame 혹은 framing)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프레임이란 특정한 문제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의 구조이며, 또 심리적 관점에서 그러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나 소통에서 사용되는 해석적 구조(interpretive structure)의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정치이념과 같이 체계를 가진 사고의 구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의 단서(cue)가 되는 사례, 이미지, 은유와 같은 파편적인 정보일 수도 있다 (Kinder and Nelson 2005).²⁾

2) 파(Farr 1996)에 의하면 정치적 프레임은 단편적인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들 사이의

이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의 개념은 다양한 하부개념으로 그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분화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트버스키와 카너만(Tversky and Kahneman 1981)의 연구에서와 같이 의약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 “생존확률 70%”와 “사망확률 30%”로 제시하는 경우, 또는 법이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와 “금지한다”로 제시하는 경우와 같이 본질적으로 정보의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다른 정보 전달 방법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프레임링 효과 연구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프레임링 효과를 매우 엄밀하게 규정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반면 다른 극단에서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화된 인식의 체계로서의 프레임(Goffman 1974)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프레임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프레임은 이 두 극단의 중간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프레임을 사실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나 강조점(Gitlin 1980, 6) 또는 전개되는 사건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적인 생각이나 이야기(Gamson and Modigliani 1987, 453)로 규정한다. 이는 등가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를 연구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프레임이나(Iyengar 1991, 11) 고프만(Goffman 1974)의 연구에서와 같이 넓은 의미의 프레임과는 차별화된다. 즉, 본 연구에서 논하는 프레임링 효과는 드러만(Druckman 2002)이 구분하는 “등가프레임 효과(equivalence frame effect)”와 “강조프레임 효과(emphasis frame effect)” 중에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³⁾

많은 기존연구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바와 유사한 의미의 프레임 개념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측정해 온 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수인종 우대(affirmative action) 정책에 대한 선호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정책에 대한 반대의 근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득(undeserved advantage)’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경우 백인들의 반응이 유의미하게 다름을 보인 연구(Kinder and Sanders 1990)가 있었다. 또 빈곤층을 보조하기 위한 정부지출을 ‘빈곤층의 기회 증대’의 프레임으로 제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중심적 아이디어나 스토리 라인이다: “프레임은 논쟁의 정확한 지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프레임은 은유, 예시, 캐치프레이즈, 묘사, 시각적 이미지 등의 양태를 띌 수 있으며 어떤 때에는 초보적인 인과분석이나 잠언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프레임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회문제들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마음의 구조인 동시에 정치적 담론 자체에 내재한 해석의 구조라는 점이다.”

3) 본 연구는 프레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곳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의 의미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

시하는 경우와 ‘세금부담 증대’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경우 시민들의 찬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연구(Sniderman and Thénault 1999) 등은 본 연구와 유사한 의미의 프레임 효과를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있어서 그 근처에 깔려있는 평가의 대상, 정책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정책에 대한 시민의 선호를 묻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정보들이 실험적 조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로 제시된 설문은 논리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측정된 선호(분포)의 차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등가 프레임 효과’라기보다는 ‘강조 프레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문에서의 프레임 효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설문은 특정한 사건 또는 인물과 같은 대상에 대해 피설문자의 의견(opinion)을 묻는 대화의 한 형태이다. 잘리(Zaller 1993b)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평가의 가중평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부분 평가의 대상이 하나의 속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평가자는 대상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은 삶의 질 향상, 평등, 사회 안정, 경제 성장 등과 같은 여러 연관 요소들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자의 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각 요인에 대한 평가와 각 요인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의 가중 평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⁴⁾

이런 맥락에서 프레임 효과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프레임이 어떤 기준이 평가에 사용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의 비중이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들이 정책의 하부 구성요소들을 정확하게 계량하여 판단과 평가의 근거로 삼는다고 기존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되는 기준의 중요성 등이 무의식적, 직관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평가 과정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모델일 수 있다. 즉 프레임은 각 기준에 따른 점수 매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하위 구성 요소들을 고려하는 기준의 채택과 그 상대적인 비중이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어떤 개인이 복지 문제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가 60%이고, 사회 안정에 대한 고려가 40%라고 하자. 이 개인은 복지관련 특정 정책 제안(예를 들어 복지 예산을 10% 증액한다)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50점(0~100 척도) 그리고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는 80점을 부여한다면, 이 정책에 대한 가중 평균을 통한 평가는 62점이 될 것이다.

설문실험을 통해 프레이밍 효과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하고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설득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한 설문실험의 효용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으나(Sniderman 1996 등), 설문 조사를 통한 설문 응답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효과가 과연 실제 정책에 대한 의견 형성 과정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 정책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설문실험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프레임에 일반 유권자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책 평가에 대한 기준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가령 ‘아젠다 세팅’이나 ‘프라이밍(priming)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변화가 뉴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Miller and Krosnick 2000). 즉 뉴스 미디어에 어떤 이슈가 자주 등장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프레이밍 효과의 함의에 대해 학자들마다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잘러(Zaller 1992)는 앞서 기술한 쾨버스의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프레이밍 효과의 의미를 해석한다. 잘러의 시각에서는 어떤 사안이든 일반 유권자의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가중평균 정도의 의미로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대부분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 확고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단지 제시되는 방식이나 강조점이 바뀔에 따라 쉽게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유권자가 앞서 기술한 다운스나 달이 규정한 ‘민주시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해석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잘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설문실험에 근거한 발견들은 시민들의 견해가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 의존성’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본 논문의 주제인 경제민주화 쟁점들, 즉 복지예산의 적정한 규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처, 대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문제는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으며, 그 문제들에 대한 정책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상당한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나의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선호의 완고함(rigid)이나 이념성(ideological)은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그리고 불확

실성 하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학습을 어렵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드러만(Drukman 2001c)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는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고 유연하게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의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언론이나 광고의 프레이밍 효과 등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예를 들어 김혜미·이준웅 2010; 김재영 2009). 정치학 분야에서는 대학생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경쟁적 프레임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영환(2012)의 작업이 매우 선구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첫째, 예외 없이 제한된 대상들, 이를테면 실험대상의 충원이 용이한 대학생이나 타겟 소비자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인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한 본 논문과는 대별된다. 둘째, 기존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광범한 정치적·정책적 선호에 대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제한된 개별 이슈에 착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선거 국면에서 한국 유권자의 일반적인 정책 선호가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고 실제적인 정책적 합의를 타진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III. 자료와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책 문항들은 18대 대선을 전후로 실시된 3차에 걸친 <제18대 대선 패널 설문조사> 중 선거 이전에 실시된 1차(11월 1일~15일 실시)와 2차(12월 10일~18일 실시)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다. 1차 설문에는 2251명이 참여했고, 이 중 2차 설문에서는 1921명(탈락률 14.7%)이 재참여에 응했다. 패널설문조사의 특성상 약간의 탈락이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에 큰 편향(bias)을 생성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볼 이유는 없었다.⁵⁾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엠브레인사(社)의 온라인 조사패널⁶⁾(약 100만 명 규모)에서 지역,

5) 실제로 본 연구에 쓰인 설문 중 1차 설문에 포함된 설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2차 설문 비참여자를 예측해 본 결과, 특별한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책 사안에 대한 입장과 설문조사에서의 탈락이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

6) 엠브레인사의 온라인 패널에 대한 내용은 http://embrain.com/business/or_intro_01.asp(검색일: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추출되었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온라인 패널 조사의 특성상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을 확률 표본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실제로도 완벽한 확률표본과는 연령 등 몇몇 인구학적 변인에서 차이를 드러냈다.⁷⁾ 그러나 실험이라는 본 연구의 설계 특성상 표본이 전 유권자의 확률적 대표성을 완벽하게 확보했는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주관심사는 모집단에 대한 추론보다는 상이한 실험 처치를 무작위로 부여받은 집단 간의 차이를 관측하는 데 있다.⁸⁾ 이를 통해 프레임의 효과를 검증하고, 특히 지지후보, 정책이슈에 대한 선호의 강도 등이 프레임 효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데는 현 표본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프레임 효과의 조작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정책 사안들 - 1) 복지예산, 2) 비정규직 문제, 3) 순환출자 문제 - 에 대한 프레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상이한 표현의 두 유형(Type A와 Type B)으로 조작화하였다. 이곳에서 각 유형은 해당 정책 사안에 대한 특정한 프레임의 실험 처리(treatment)인 것이다. 설문 참여자들을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였고, 각 그룹에게는 두 유형 중 하나의 설문지가 주어졌다.⁹⁾ 참여자들은 경제 정책 영역

2013. 1. 2) 참조.

- 7) 일반적인 온라인 패널의 문제점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제한적인 고연령·저학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약 40%가 되지만, 본 조사에서는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드러난 각 연령대별 후보자 지지율은 출구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연령대별 지지율과 대동소이하였다. 예를 들어, 출구조사에서 박 후보는 50대에서 62.5%, 60대 이상에서 72.3%를 얻어 각각 37.4%, 27.5%를 얻은 문 후보를 따돌린 반면, 20대에서는 33.7%, 30대에서는 33.1%, 40대에서는 44.1%의 지지를 얻어 각 연령대에서 문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12/12/19). 본 2차 패널에서 양 후보에 대한 투표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만 계산하면 박근혜 지지율은 20대 27.39%(376명), 30대 32.02%(481명), 40대 42.83%(502명), 50대 60.85%(281명), 60대 63.64%(77명)로 나타났다.
- 8) 이는 물론 무작위로 할당된 두 집단이 실험적 처치 이전에 매우 균질한 집단인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 무작위 할당된 두 집단은 각 948명과 973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성별, 연령, 소득,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후보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이상적으로는 매 문항마다 설문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두 개 중 하나의 프레임에 노출시켜 설문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연관효과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현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두 유형의 설문지만이 사용되었고 같은 실험그룹에 배정된 참여자들은 세 개의 정

의 세 문항들을 포함한 총 9개의 정책 문항들은 11점 척도로 답하였으며 ‘잘 모르겠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개의 실험문항에서는 각 정책 사안에 관한 공동된 질문을 던지되, 선행하는 문장에서 관련 정보나 맥락을 제공할 때 차이를 두어 프레임 효과를 조작화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세 정책 사안에 일관된 두 개의 프레임 셋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관심사는 어떤 하나의 논리에 근거한 프레임이 특별히 영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한국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프레임 효과에 민감한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8대 대선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다양한 정책 문제를 포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레임 효과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현상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정책 사안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1) 정책의 기회비용이나 상충성(trade-off)을 생각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복지 예산), 2) 특정한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의 제시(비정규직 문제), 3) 주요 후보의 입장에 대한 정보 제공(순환출자 문제) 등을 달리함으로써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문항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았다.

우선 복지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은 ‘사회 양극화’와 ‘경제위기’로 각각 프레임되었다. 전자는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반면 후자는 복지 예산 확대에 신중해야만 하는 이유로서 예상되는 경제위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설문참가자들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두 프레임 중 하나의 프레임에 노출된 후 해당 문항에 답했다. 양극단의 응답 카테고리는 “현행유지(0)”와 “예산확충(10)”으로 주어졌다. 구체적으로 두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Type A. 사회양극화 프레임] “경제성장의 성과가 각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Type B. 경제위기 프레임] “수년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는 복지 예

책 사안에서 같은 프레임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본 설문의 특성상 이러한 설계적 제한점이 문제를 초래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었다. 우선 세 정책 사안에 대한 실험설문들은 정책 사안을 묻는 전체 9개의 문항 중간 부분에 3, 4, 6번째로 삽입되어 있었고 동일 그룹에 일관된 진보적 혹은 보수적 프레임이 제공되기도 않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세 문항만 따로 하나의 집합으로 연관되는 방식으로 답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 규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차 설문에 이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적정한 균형점을 물은 것이 있었고, 패널 서베이의 특성상 2차 실험 설문에 참여한 모든 피설문자들은 약 한 달 전(11월 1일에서 15일) 1차 설문에서 이 문항에 대해 답을 했다. 실험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1차 설문에서의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자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기본 성향을 알 수 있는 기준점(baseline)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차 설문의 관련 문항은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이 4점 척도(전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로 대답하게 했으며, ‘모름’ 또는 무응답이 허용되지 않았다.

두 번째 경제 정책 설문이었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그 프레이밍 효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논거를 제시하는 ‘반대논거 제공’ 프레이밍과 ‘반대논거 미제공’ 프레이밍으로 조작화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반대논거는 기업의 잠재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표현되었다. 반면 비정규직 문제는 워낙 대선 이전부터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옹호 입장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자율권 보장(0)”과 “전면적 정규직 전환(10)”을 양극으로 하는 11점 척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두 프레이밍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Type A. 반대 논거 제공 프레이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 [Type B. 반대 논거 미제공 프레이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설문 문항 역시 실험적 조작이 포함되지 않은 공동문

항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응답자들이 4점 척도로 답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2차 실험설문 참여자들은 모두 답을 하였다.

마지막 경제정책 설문인 ‘순환출자’와 관련된 프레임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후보입장 제공’ 프레임과 ‘후보입장 미제공’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이 조작적 정의는 유권자들에게 어렵고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현안에 대해서 특정 입장과 후보자를 연결하는 것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즉, 익숙하지 않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단서(cue) 내지는 정보의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Lupia 1994). 정책에 대한 선호가 후보자 선호로 이어진다는 통상적인 인과관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정책에 따라 그 역(易)의 인과관계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위의 두 정책 사안과 마찬가지로 설문참여자들은 무작위로 배정되어 이 중 하나의 문항만을 보고 답하였고 양극단은 “순환출자 전면 해소(0)”과 “기업자율에 맡김(10)”으로 주어졌다.

- [Type A. 후보 입장 미제공 프레임]: “재벌의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Type B. 후보 입장 제공 프레임]: “이번 19대 대선에 양대 후보는 향후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주요 논점 중 하나였다.¹⁰⁾ 따라서 앞의 두 문제의 경우 2차 설문시기 박-문 양 후보자 지지에 따라서

10) 11월 21일 전국에 중계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토론에서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재벌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수단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많은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 방안에 따라 대기업이 일자리를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할 것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화 이전 일차 설문에서 측정된 박-문-안 지지 그룹별로 프레이밍 효과를 보는 것이 보다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순환출자와 관련된 문항은 1차 설문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디자인은 이상의 실험적으로 조작화된 정책선호 변수들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후보라는 매개변수와 어떤 상호작용을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설문 응답자들의 지지후보와 관련해서 사용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요 후보들의 이름과 “기타후보”, 그리고 “투표하지 않겠다”가 포함된 선지에서 응답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기 이전에 실시되었던 1차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IV. 결과

1. 지지후보별 선호의 차이

본 연구에서 검토된 세 가지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상당히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어진 세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 양대 주요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그 상대적 위치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곳에서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양 그룹 간의 차이이며, 전체적인 평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 프레임의 효과도 각 지지그룹 내에서 무작위로 할당되었으므로 평균적으로는 양 그룹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은 경제 정책들에 있어서 후보자 지지에 따른 상당한 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늘리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 그렇지 않으면 2단계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일보 12/11/22).

〈표 1〉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유권자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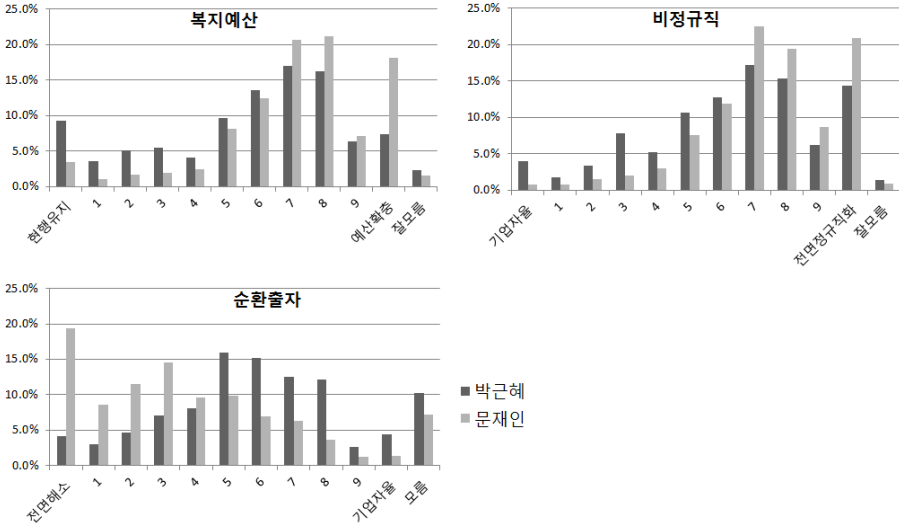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입장*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p-value	전체
복지예산	5.69	7.06	p<0.01	6.44
비정규직	6.33	7.37	p<0.01	6.95
순환출자	5.44	3.25	p<0.01	4.14
'모름' 응답자 비율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전체	
복지예산	2.3%	1.6%	2.0%	
비정규직	1.4%	0.9%	1.4%	
순환출자	10.3%	7.2%	9.1%	
피설문자 총수	692	1,025	1,921	

* '모름' 응답을 제외한 평균

흥미로운 사실은 세 가지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순환출자에 대한 설문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9% 이상이 “모름”을 선택하여, 복지예산이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들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양 후보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입장의 차이에 반영이 되는데, 순환출자에 대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입장의 차이는 약 2.2점으로 비정규직 문제나 복지 예산 문제와 관련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입장의 차이보다 컸다. 다시 말해, 선호의 극화(polarization)가 더 “어려운” 이슈인 순환출자 문제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1〉은 이러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특히 극화의 양상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입장은 비교적 일치하며, 특히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상당수(14.5%)가 “전면적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후보 지지자들 사이의 상당한 입장 수렴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복지예산이나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 후보 지지자들의 18.4%가 복지 예산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박 후보 지지자들의 7.5%만이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 순환출자와 관련된 극화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 진보적인 “전면 해소”에서부터 가장 보수적인 “기업자율에 맡긴다”는 입장까지 양 후보 지지자들의 선호가 전



〈그림 1〉 지지후보에 따른 선호 분포

반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양 “진영” 사이 극화의 문제는 과연 얼마나 고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하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에 주목하여 각 정책 사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2. 복지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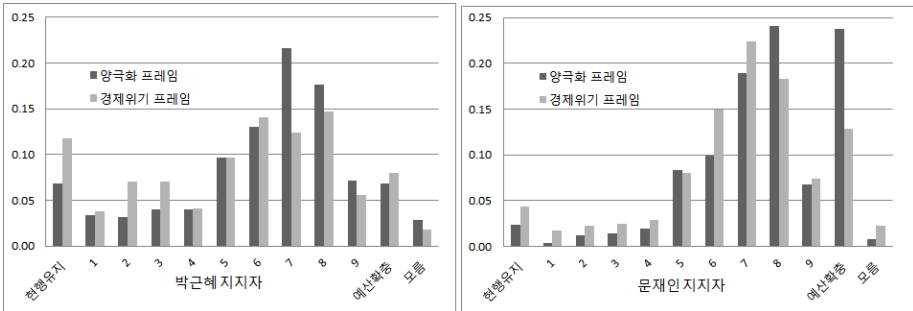
〈표 2〉는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응답자의 입장이 프레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기본적으로 양대 후보 지지자들 공히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양극화 프레임에서는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경제위기 프레임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그룹에서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대 후보 지지자들의 복지예산과 관련된 선호가 정책이 고려되는 맥락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유권자들에게 복지예산과 관련된 고려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들이 가지는 입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잘리의 이론을 빌어 말하자면, 유권자들은 복지예산과 관련된 평가에 있

〈표 2〉 지지후보와 프레임에 따른 복지예산의 적정 규모: 현행유지(0) — 예산확충(10)

	양극화 프레임	경제위기 프레임	차이	p-value
전체 응답자*	6.83 (930)	6.06 (953)	0.77	p<0.01
박근혜 지지자	6.06 (342)	5.32 (334)	0.74	p<0.01
문재인 지지자	7.46 (498)	6.69 (511)	0.77	p<0.01
모름 응답 수	18	20		

* 총 응답자 수는 1921명이며 이 중 948명은 사회양극화 프레임의 설문에 답했고, 973명은 경제위기 프레임에서 답했음. 모름 응답자의 비율은 18명, 20명으로 낮은 수준. 기타 후보 지지 또는 지지후보 없음의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양 후보 지지자의 합이 전체응답자보다 적음.



〈그림 2〉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지지후보별 프레임링 효과

어서 성장과 평등이라는 관련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나름의 ‘가중평균’을 내리는데, 주어진 프레임에 의해 그 상대적 비중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 예산 규모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는 프레임링 효과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측 그래프의 오른쪽 끝에 보이는 예산의 전면적 확충을 선호한 문재인 후보 지지자 그룹이다. 양극화 프레임에서는 예산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을 취한 이들이 거의 24%였던 반면 경제위기 프레임에서는 13% 정도로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발견된다. 반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표 3〉 복선호강도와 프레임에 따른 복지예산의 적정 규모: 현행유지(0) — 예산확충(10)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한다 (1차 설문)	양극화 프레임	경제위기 프레임	차이	p-value
전적으로 반대	8.84 (66)	8.35 (86)	0.49	0.15
대체로 반대	7.61 (375)	6.8 (390)	0.81	p<0.01
대체로 찬성	6.17 (380)	5.51 (365)	0.66	p<0.01
전적으로 찬성	5.25 (109)	3.41 (111)	1.84	p<0.01

선호의 구조가 보다 안정적이기는 하나, 역시 가장 눈에 띄는 프레임링 효과는 좌측 그림의 가장 좌측에 보이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이들이다. 박 후보 지지자들은 경제위기 프레임에서는 약 12% 정도가 복지예산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양극화 프레임에서는 이 비율이 7% 이하로 줄어들었다. 요약하자면,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라 프레임링 효과는 극단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수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프레임의 효과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공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 3〉은 1차 설문의 복지예산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하여 프레임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인 것으로 선호의 기본적인 강도와 프레임링 효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강력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진보적 입장의 유권자들(즉, 복지보다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세계경제 위기라는 프레임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아마도, 이들은 이러한 논리를 이미 고려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경제위기라는 반론을 접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1차와 2차 설문 사이에 약 한 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의 유권자들을 매우 일관되고 강력한, 따라서 프레임의 효과를 거의 받지 않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지 지출보다는 경제 성장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은 프레임링 효과가 가장 큰 집단이었다.

〈표 4〉 지지후보와 프레임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자율(0) — 전면정규직화(10)

	반대 논거 미제시	반대 논거 제시	차이	p-value
전체 응답자	7.01 (962)	6.89 (933)	0.12	p=0.30
박근혜 지지자	6.50 (337)	6.17 (345)	0.33	p=0.10
문재인 지지자	7.34 (511)	7.40 (498)	0.06	p=0.65
모름 응답 수	20	18		

3.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앞에서 보인 것처럼 이 문제는 양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히 합의도가 높은 문제였고 또한 프레임의 영향을 덜 받는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논거가 제시되었을 경우, 응답자들의 선호 방향이 프레임링 효과에 의해서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0에 가까운 입장)으로 이동해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평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어느 그룹에서도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문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논거가 제공되었을 때 오히려 더 전면적 정규직화의 방향으로 유권자의 선호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반대 논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지 못함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 고용 의지 약화와 고용 축소” 등의 보다 세련된 논거를 제시하는 프레임을 사용했다라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 지지자들 간의 차이가 경제 민주화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작다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문제가 이미 사회적 합의도가 비교적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말해 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도가 높은 정책적 이슈일수록 유권자들은 반대 논거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은 지지후보가 아닌 해당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기준으로 나눈 〈표 5〉에서도 드러난다. 1차 설문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해결에

〈표 5〉 선호강도와 프레임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자율(0) — 전면정규직화(10)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1차 설문)	반대 논거 미제시	반대 논거 제시	차이	p-value
전적으로 반대	8.3 (283)	8.17 (254)	0.13	p=0.40
대체로 반대	6.92 (431)	6.88 (439)	0.04	p=0.76
대체로 찬성	5.92 (197)	5.66 (202)	0.26	p=0.31
전적으로 찬성	4.64 (50)	5.11 (38)	0.47	p=0.53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응답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응답자들까지 공히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반대 논거의 제시여부가 이들의 입장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 선호는 지지후보에 따라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여타 경제 정책들에 비해 상당히 근접해 있는 이슈이다. 둘째, “기업자유 침해”라는 반론이 제공되는 프레임이 본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입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지 후보나 기본적인 선호 강도에 따른 프레임링 효과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마 제공된 프레임이 구체성을 결여해서이거나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경제이슈이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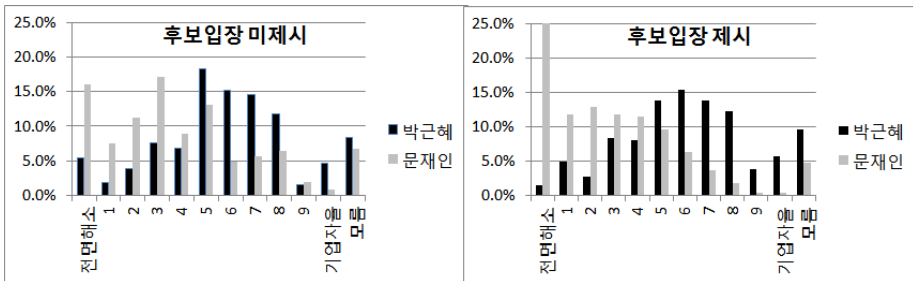
4.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쟁 지점이었으며 주요 후보자 간의 입장 차이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이슈였다. 특히 앞에서 살핀 것처럼 순환출자 문제는 비교적 ‘복잡한’ 문제여서 정책적 입장이 없는 사람들도 비교적 많았던 것과 동시에 양 후보 지지자 간 차이도 상당히 컸다.

앞의 두 이슈에 대해서는 주요 양대 후보에 대한 지지자 별로 프레임링 효과를 보았지

〈표 6〉 지지후보와 프레임에 따른 재벌의 순환출자: 전면해소(0) — 기업자율(10)

	후보입장 미제시	후보입장 제시	차이	p-value
전체 응답자	4.27 (857)	4.02 (889)	0.25	p=0.07
박근혜 지지자	5.45 (240)	5.70 (236)	0.25	p=0.25
문재인 지지자	3.49 (250)	2.65 (258)	0.84	p<0.01
안철수 지지자	3.84 (256)	3.86 (287)	0.02	p=0.93
모름 응답 수	91	84		



〈그림 3〉 재벌의 순환출자에 대한 프레임링 효과와 지지 후보별 극화

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설문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의 세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일화 TV토론에서 여실히 나타났듯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첨예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이곳에서 주목할 점은 재벌 순환출자에 대한 선호가 지지 후보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중간 정도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나타난 프레임링 효과를 보면, 박-문 양대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

을 때 보다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된 경우 순환출자에 대한 선호가 보다 극화되고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는 특히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양대 후보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보다 제시된 프레임에서 약 0.84 포인트(0에서 10까지의 11점 척도) 정도 더 문재인 후보의 공약 내용인 순환출자 전면 해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림 3〉은 이를 보다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후보자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좌측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박-문 양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 간에 여전히 선호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중복되는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우측 그림은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된 프레임에서 재벌 순환출자 문제에 있어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선호 구조가 뚜렷하게 양분되어 극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것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후보자 입장이 제시되었을 때 “전면해소”라는 후보자 공약과 일치하는 항목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위시하여 전반적으로 선호 분포가 왼쪽 그림과 비교하여 훨씬 좌측으로 쏠린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후보자들의 입장이 제시된 프레임이 지지자들 선호의 극화를 불러온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이지만, 유권자의 정책 선호가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의 ‘전통적인’ 모델, 즉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우선하고 이에 준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순환출자라고 하는 비교적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가진 정보가 제한적이고 또 정책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나 정당으로부터 “선택”이 되는 과정이거나, 정책적 판단의 실마리(cue)를 얻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을 정보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로 이용하는 모델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모름”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이다.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앞서의 두 경제 정책에서 전체적으로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2% 이하였던 반면(복지예산의 경우 1.98%,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1.35%), 재벌 순환출자 정책에 있어서

11)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후보자 입장이 제시되었을 때 약간 우측으로 더 쏠리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아마도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보다 중간적인 “기존 순환출자 인정, 신규 금지”라는 입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상적으로, 만약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기업 자율”이라는 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이었으면 이곳에서 보다 더 드라마틱한 극화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표 7〉 재벌 순환출자에 대해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

	지지 후보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지지후보 없음
후보 입장 미제시	8.40% (262)	6.72% (268)	7.91% (278)	22.66% (128)
후보 입장 제시	9.58% (261)	4.80% (271)	8.89% (315)	14.55% (110)

는 약 9% 정도가 모른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재벌 순환출자 정책은 다른 경제정책에 비해서 “어려운” 정책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7〉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유권자들이 후보들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실마리를 얻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재벌 순환출자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7%였으나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된 경우 이 비율이 4.8%로 줄어들었다. 아마도 문항에서 재벌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실마리를 얻는 사람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반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응답자들의 불확실성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절충적 입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도 양대 후보자의 입장 제시 프레임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닌 양대 후보의 입장이 제시된 프레임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¹²⁾

흥미롭게도 가장 프레임링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난 그룹은 1차 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었다. 이들은 양대 후보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약 23%가 순환출자에 대해서 선호가 없는 것으로 대답하였고, 이 비율은 후보 입장이 제시된 프레임에서는 약 15%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지식의 수준이 높지 않고 정책적 입장이 뚜렷하지 않은 이 그룹에서도 양대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정보는 이들의 정책적 선호를 구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분할된 샘플에서의 제한된 케이스 수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 대한 이상의 해석은 가능하다.

IV. 결론

본 논문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쟁점들이 제공되는 프레임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유의미한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문제, 즉 복지 예산의 규모 문제와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설문 응답자들 및 지지 후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프레이밍 효과가 있었다. 둘째, 프레이밍 효과는 중간 변수(mediator)에 의해서 매개된다. 즉, 전반적인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쟁점별로, 선호의 강도에 따라,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프레이밍 효과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의 유의미성을 의심하게 할 만큼 크지는 않았다. 즉, 유권자들은 비교적 지지하는 후보와 이념성향에 따른 일관되고 안정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프레임에 따른 정책 선호의 차이가 지지 후보에 따른 정책 선호의 차이를 상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프레이밍 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한국의 유권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 쟁점들의 맥락에서는 낙관론에 가까운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는 컨버스나 잘러 등이 내린 미국의 유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진단과 대비된다.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 설문에 대한 응답의 매우 높은 상관성, 그리고 지지 후보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프레임의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 등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경제 민주화 이슈에 대한 상당히 정보화되고 숙고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큰 틀 내에서 존재하는 프레이밍 효과는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즉,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경제 민주화 관련 여러 쟁점들의 다차원성과 복잡성, 가치의 상충에 따른 트레이드오프(trade-off)의 불가피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프레이밍 효과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프레이밍 효과는 선호의 즉흥성이라는 해석보다는 유권자들이 현재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설득의 근거는 있으며, 여러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합의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프레이밍 효과가 전무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유권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프레이밍 효과가 전혀 없다면 이는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이미 여러 관련된 가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입장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정파적인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입장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자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후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프레이밍 효과의 정도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유의미한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선호가 이념적으로 고착화된 선호는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경제 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낙관적인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합의가 확인된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양대 후보 지지자들 간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대한 규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 특히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매우 정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알게 됨으로써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경제 민주화라는 큰 방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에 기반을 두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유권자들 간의 차이가 소모적인 사회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이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투고일 2012년 12월 30일

심사일 2013년 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3년 1월 30일

참고문헌

- 김재영. 2009. “정치광고의 관여가 메시지 프레이밍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5권, 105-146.
- 김혜미 · 이준웅. 2011. “인터넷 뉴스와 댓글의 뉴스 프레임 융합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32-55.
- 동아일보. 2012. “박근혜 vs 문재인 경제공약 심층점검 <3> 복지재원 마련 어떻게.” (12월 10일). <http://news.donga.com/2012president/mNav01/all/3/000635/20121209/51451248/1> (검색일: 2012. 12. 23).
- 문화일보. 2012. “방송3사출구조사…박근혜 50.1% · 문재인 48.9%.” (12월 19일). <http://www>.

- munhwa.com/news/view.html?no=20121219MW180257312849(검색일: 2012. 12. 23).
- 민주통합당. 2012. “대선 공약집.” 『문재인 시민캠프』. http://www.moonjaein.com/hongbo_news/731222(검색일: 2012. 12. 23).
- 박근혜 후보 후원회. 2012. “대선공약집.” 『박근혜의 국민행복캠프』. http://www.park2013.com/policy/eyepledge_1.html(검색일: 2012. 12. 23).
- 박영환. 2012. “프레임들의 경쟁이 정치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155-8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후보자 안내.” 『제18대 대통령 선거』. <http://vote.necpr.go.kr/>(검색일: 2012. 12. 23).
- 한국일보. 2012. “후보단일화 TV토론] 문재인”기존 순환출자 완전 해소해야.”(11월 22일).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11/e2012112200233396380.htm>(검색일: 2013. 12. 23).
- Callaghan, Karen J. and Frauke Schnell. 2005. *Framing American Polit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Chong, Dennis, and James N. Druckman. 2007. “Framing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No.1, 103-126.
- Converse Paul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206-61. New York: Free.
-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Druckman, James N. 2001a. “Evaluating framing effec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 No.1, 91-101.
- _____. 2001b. “On the limits of framing effects: Who can frame?” *Journal of Politics* 63. No.4, 1041-1066.
- _____. 2001c. “The Implications of Framing Effects for Citizen Competence.” *Political Behavior* 23. No.3, 225-256.
- Farr, Robert M. 1996. *The Roots of Modern Social Psychology, 1872-1954*.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Gaines, Brian J., James H. Kuklinski, and Paul J. Quirk. 2007. “The Logic of Survey Experiment Reexamined.” *Political Analysis* 15. No.1, 1-20.
- Gamson, William A. and Andre Modigliani. 1987. “The Changing Culture of Affirmative Action.” In Richard D. Braungart, ed. *Research in Political Sociology* 3, 137-177.

- Greenwich, CT: JAI Press Inc.
- Gitlin, Todd.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Iyengar, Shanto.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ckson, John E. 1975. "Issues, Party Choices, and Presidential Vo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No.2, 161-185.
- Jacoby, William G. 2000. "Issue Framing and Public Opinion on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No.4, 750-767.
- Lacy, Dean. 2001. "A Theory of Nonseparable Preferences in Survey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No.2, 239-258.
- Lupia, Arthur. 1994. "Shortcuts Versus Encyclopedias: Information and Voting Behavior in California Insurance Reform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No.1, 63-76.
- Markus, Gregory B. and Philip E. Converse. 1979. "A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lectoral Choi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No.4, 1055-1070.
- Miller, Joanne M. and Jon A. Krosnick. 2000. "News Media Impact on the Ingredients of Presidential Evaluations: Politically Knowledgeable Citizens Are Guided by a Trusted Sou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No.2, 301-315.
- Nelson, Thomas E. and Donald R. Kinder. 1996. "Issue Frames and Group-Centrism in American Public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58. No.4, 1055-1078.
- Schumpeter, Joseph A. 1942(2006).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Routledge.
- Sniderman, Paul M. and Douglas B. Grob. 1996. "Innovations in Experimental Design in Attitude Survey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377-399.
- Tversky, Amos and Kahneman, Daniel.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 Zaller, John.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ller, John and Stanley Feldman. 1992. "A Simple Theory of the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Versus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No.3, 579-616.

ABSTRACT

Framing the Issue of Economic Democracy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 Survey Experiment

Won-ho Park | Seoul National University

T.K. Ahn |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 S. Hahn |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assess how issue framing affects voters' preference on three economic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1) the welfare budget, (2) the contingent workers problem, and (3) regulation on cross-shareholding practices. We conduct a survey experiment where we vary the wording of questions integrating two competing issue frames for each policy debate. Respon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issue frame conditions. We examine whether issue framing significantly influences voters' policy preference and identify the variables moderating framing effects. Our results clearly show that, depending upon how the policy debate is framed, voters' preference changes significantly. Second, the magnitude of its effects is not however comparable to that of the candidate preference. Third, the size of framing effects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upon policy areas and respondents' candidate preference.

Keywords: fram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policy preference, economic democracy